

## 부품·소재개발 집중지원

올해부터 연구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들로부터 시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에 부품·소재분야 기술개발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개발완료된 부품 및 소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보형제도가 도입된다.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단장 박규태 산업기술연구원 이사장)은 2월 18일 글로벌 소싱 역량 강화를 위한 2000년도 부품·소재산업 추진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기연구소, 화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8개 공공연구기관은 이달 말 통합연구단을 발족하고 핵심 부품·소재사업을 발굴하게 되며 추진기업들의 기술력을 판단하게 된다.

또 이 통합 연구단이 발굴한 기술개발사업은 20여개 벤처캐피탈 및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투자기관 협의체에서 시장성,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투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산자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자금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5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

원할 예정이다. 또 시제품개발에 2천286억원, 사업화자금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연구단과 투자기관협의체는 올해 15개 유망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올 4월중으로 5개 유망기업을 먼저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개발 완료된 부품·소재들이 시장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7월부터 유압실린더, 소형모터, 콘덴서, PCB, 릴레이 등 5개분야에 대해 신뢰성보형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관련제도 정비를 서두를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신뢰성평가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계류부품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5대 핵심부품·소재분야를 중심으로 1/4분기 중 신뢰성 평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4분기 중 신뢰성 평가 인증 사업 운영 요령을 제정 7월부터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 중소 정책자금 한도 두기로

앞으로 한 중소기업체가 정책자금을 이것저것 신청해 과도하게 타내는 일이 어렵게 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정부 돈이 일부 중소기업체에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50억원 (용자 잔액) 또는 연간 매출액의 1백25% 이내다.

일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하고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다른 부처는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토록 하겠다고 중기특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의 정책자금 집행내역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데 이어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를 범 정부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병우(安炳禹)중기특위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앞다퉀 각종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내놓아 유사한 성격의 자금이 특정업체에 중복 대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청을 비롯해 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 등 12개 부처에서 83개 지를 운영중이며, 올해 전체예산은 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한편 중기특위는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국한해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건설한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운영자금 용자는 민간 금융기관에 위임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 처	자금종류	자금규모 (억원)
중 소 기 업 청	19	27,295
산 업 자 원 부	26	9,159
정 보 통 신 부	8	4,810
농 립 부	4	4,474
문 화 관 광 부	5	1,631
노 동 부	9	1,367
과 학 기 술 부	2	1,191
환 경 부	3	1,040
해 양 수 산 부	3	390
건 설 교 통 부	2	100
국 방 부	1	37
보 건 복 지 부	1	30
총 계	83	51,512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해 전체규모를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창업지원·벤처육성·구조조정·해외시장 개척 등 자금을 투자한 뒤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 조달이 어려운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기로 했다.

## 中企특위 정례화... 심사기능 확대

중기특위의 회의가 월1회로 정례화 된다. 또 중기특위 주관으로 중소기업 관련예산의 사전검토, 중소기업 관련법령 및 통계의 정비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 시책간 유기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월 28일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특위 2000년 주요

업무계획'과 '중기특위 운영의 활성화방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회의가 월1회로 정례화 되고 회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민원실을 오는 5~6월에 전국순회 개최하며 10월말 제2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를 세계중소기업자대회(ISBC)와 연계 실시키로 했다. 또 2000년 3월 1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강

원도 북평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전북 정읍 제2·3지방산업단지, 전남 대불산업단지)을 해당 지자체 요청에 따라 5년간 재지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재경부에서 마련한 어음제도개선 방안을 중기특위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 어음제도 개선 구체계획 곧 마련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 등 어음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추후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확정·발표된다. 또 WTO 협정에 대비,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분야의 양허협상에서는 개방정도를 적절히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월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각 경제부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중소기업 납품·협력 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 어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

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차후 개최되는 경제장관 간담회에 이를 확정·발표했다.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진통을 겪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출범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조국과 협력관계 유지, 관련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이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함께 BIA(기확정의제, Built-In-Agenda) 협상에 참가, 농업분야는 특수성을 감안,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의 양허협상에서는 개방 정도를 적절히 조정키로 했다.

## 중기청, 1조2천억원... 상반기중 8,2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2월 1일 '200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신청·접수 및 지원을 개시하였다. 올해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구조개선자금 7천억원,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창업자금 2천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으로 이중 68% 수준인 8,200억원이 상반기 중 지원될 계획이다.

### ▲ 중소기업 창업자금(2천억원)

시설·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기술력 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 창업자나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연리 8.25%, 만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7천억원)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장·안정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생산설비 구입·개제·양수자금, 경매물건 경락자금, 사업전환자금 등을 연리 8.25%, 만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업체당 연간 20억원(잔액기준 40억원) 한도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3천억원)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장·안정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원부자재 구입, 국내의 판로개척, 기술 및 경영혁신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과 일시적인 자금난을 처한 경우 정상화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지원조건은 연리 8.25%(특별자금은 9.0% 이내), 만기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다.

## ■ 어떻게 지원받나

### 구비서류 갖춰 중진공 등에 신청·접수

#### - 자금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의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와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및 영업점에 신청을,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일

반자금) 또는 지방중기청(특별자금)에 각각 신청·접수하면 된다.

#### - 자금지원 신청서류는,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은 자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부(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신청시 3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구조개선자금은 자금지원신청서 1부, 금융거래확인서 1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투자확정입증서류(해의 한국중소기업전용단지 투자업체의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지원신청서 1부, 금융거래확인서 1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 자금지원기간은,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상·하반기로 나뉘어 상반기는 2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하반기는 8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된다. 구조개선자금은 3차에 걸쳐서 1차는 2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2차는 5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3차는 8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된다.

#### - 외부회계감사대상 이외의 기업에 대한 별도 제한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이상 신용대출 신청업체와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10억원 이상 중진공 대출 신청업체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사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 - 자금지원신청시 유의사항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비율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신청

이 제외된다.

단, 벤처기업과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

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 정부발주공사 수의계약 대폭 축소

정부발주공사중 수의계약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조달청이 최근 마련한 '수의계약 축소방안'에 의하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점수로 평가하는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던 것을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2개 업체이상 투입시 작업상 혼잡이 발생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던 공사기간의 중복도를 2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작업상 혼잡이 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평가기준은 기술사항(70점)과 일반사항(30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종전에는 일반사항 평가항목의 경영상태평가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만을 평가하였으나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

본 회전을 항목을 추가, PQ심사기준과 일치시켰다.

특히 부실별점 평가도 PQ수준으로 보완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평가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던 공사중 금액기준으로 33% 이상이 경쟁계약으로 전환('99년 77건 3,960억원 중 15건 1,277억원 경쟁전환가능)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사의 수의계약이란 특정인의 기술과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수의계약사유를 점수로 평가하는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일정 점수 이상으로 평가된 공사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다.

## 조달청, 중소·벤처기업 판로 대폭 지원

조달청은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한 시장성 확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구매자금을 현행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우수제품 판로지원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또한 우수제품 선정회수를 '99년에 분기별로 실시하던 것을 년 6회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우수제품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

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의 계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기간도 연간 단가계약시 우수제품인정기간, 기술인증기간 또는 수의계약 사유기간이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시점에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1년간, 6개월 미만이면 6개월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적격심사사에도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납품실적이

없어도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납품실적과 관계없이 우선 구매토록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에 설계시부터 분

리발주토록 적극 권유키로 했다.

또 연 2회이상 전시회 개최(4, 9월), 연 1회 우수제품 총람 카탈로그 발간, 연 4회 팜프렛발간, 조달청 인터넷 등에 게재해 민간구매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조달청, 전국 단일 통신망 제공

조달청은 2월 14일부터 입찰·낙찰 등 조달정보 음성안내시스템을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44-0700」을 통해 시내전화요금으로 조달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안내시스템에서는 시설공사나 내·외자 구매 등 각종 입찰과 관련, △입찰일정 △입찰결과 △낙찰업체 △조달요청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rok.go.kr>)에서도 동시에 소개된다.

## 특허청 운영 종합 민원실 이용자 '복적'

『특허출원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면 민원실의 심사관을 찾으세요.』

특허청(<http://www.kipo.go.kr>)이 우수 심사관을 배치해 운영중인 종합민원실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8월 고객 감동 서비스 차원에서 특허청이 전격적으로 민원실에 배치한 우수 심사관들은 출원절차에서부터 특허등록 가능여부, 출원서류 작성 등 까다롭고 어려운 특허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친절히 상담해 준다.

이들 심사관은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급 우수심사관들로 본청에 2명, 서울사무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심사국 심사관을 민원실에 하루씩

파견, 순회 근무토록 했던 기존의 민원실 운영에서 탈피해 전문인력을 고정배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민원실 운영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단위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특허청이 기상청과 해양경찰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특허청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객만족도가 '98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민원실에 배치함으로써 특허출원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